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GMO, 유전자, 변형, 표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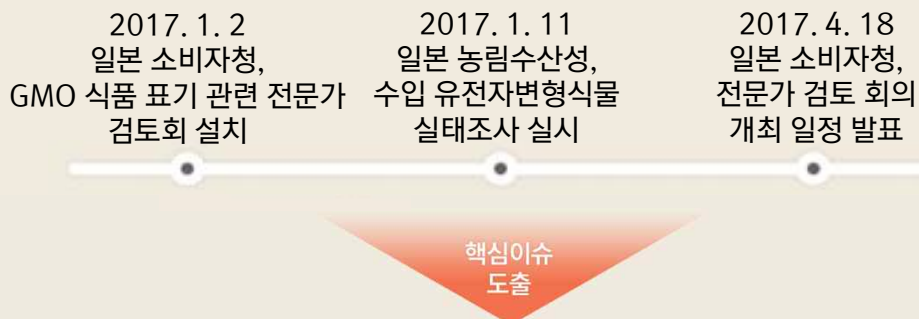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일본, GMO, 유전자, 변형, 표시, 규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일본 소비자청,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도 재검토”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소비자청, 유전자 변형(GMO)식품 표시제도 재검토

일본 소비자청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 1월 전문가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4월 26일 첫 회의에서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을 참고해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의 확대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의 상한선을 줄이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2001년에 도입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8종류 농산물과 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두부, 된장, 과자 등 33개 식품이다. 그러나 해당 식품의 원재료 가운데 GMO비중이 전체 원료의 3위 안에 들지 못하거나 함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일본 소비자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현행 제도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표시 의무 기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이번 검토 회의뿐만 아니라 전세계 GMO 90% 이상을 생산하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대두, 옥수수 등에 대한 비의도적 GMO 혼입 비율 조사 및 유럽연합의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GMO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 GMO 식품의 표시제는 '원료 성분의 3위권 내, 5%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만 표기를 지시했지만, 개정안은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 전부를 표시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의 규정을 참고해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식용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나, GMO 표기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법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향후 GMO 수입량이 높은 일본에서 표시 규정이 강화된다면, 대일본 수출 식품은 물론, 국내 GMO 표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식품 기업 및 유통업체들은 향후 일본 내 GMO 규정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식품에 GMO가 원료에 포함돼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맞는 정확한 표기를 해야할 것이다.

1. 遺伝子組換え表示制度の検討会が初会合, 全国農業新聞, 2017. 5. 12
2. 遺伝子組み換え食品の表示拡大を検討 消費者庁, 日本経済新聞, 2017. 4. 25